

문화산책

강혜경

문학박사·문화기획자



누군가의 삶을 바꾼 게임 한 편, 밤새도록 마음을 붙잡은 드라마의 한 장면,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온 노래 한 소절. 요즘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어 준다.

문화적 배경과 관습이 다른 이국의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 즉 '말이 통하지 않아도 통하는' 콘텐츠들이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놀라운 성취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것을 가능케 한 '기술'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술과 문화는 단순히 결합하는 차이를 넘어,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007년, 광주는 '문화기술연구원'이라는 미래지향적 상상을 시작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국가 단위의 기관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은 휘어졌고, 정책은 좌초를 반복했다. 실행의 책임은 흩어졌고, 이상은 점점 희미해졌다.

특별기고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전남도가 역점 추진한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집적화단지 지정되었다. 3.2GW 규모인 이번 사업은 전체 10개 단지 조성 시 단일단지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이며, 민자 2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민선 7기 출범 후 해상풍력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사업 구역을 확정하고, 어업인, 송전선로 예비 경로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더욱 값진 성과이다.

전남도는 2021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산업국과 해상풍력산업과를 신설했다. 탄탄한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모든 직원이 역량을 키워며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오고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 구역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2년 간 추진해 최종 확정되었다. 단순히 개별 단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 입지를 발굴하고 재배치해 향후 발전단지 조성을 수월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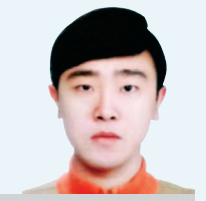
또한, 전력계통은 대부분의 단지가 공동 접속설비를 통해 구축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

취재수첩

광주 북구의회 심불에 담긴 의미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광주 북구의회의 심불마크는 '난상토의', '난상공론'에서 뜻을 가져와 형상화한 심불이다. 옳고, 그름을 논하고 소통하는 의회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심불에는 화합과 소통이란 목표도 담겼다.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동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물꼬를 텃으니

오늘날 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 강국이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고, BTS는 단일 공연으로 191개국에서 99만명의 팬을 모았다.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력, CT(Culture Technology)가 존재했다.

문화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공연을 실감형으로 만들고, 드라마의 서사를 메타버스로 확장시키며, 창작자와 관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감정을 충족히 직조하는 알고리즘이자, 감동의 방식을 혁신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되며 시작됐다. 당시 광주에 이 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논의는 정치권과 학계의 폭발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기구 통제하에 이우로 계획을 유보했고, 박근혜 정부는 연구소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문재인 정부조차 예비타당성조사서를 제때 추진하지 못하며 실현 의지는 신기루가 됐고, 정책적 약속은 끝내 책임있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사이 세계는 문화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나라에서는 콘텐츠에 인공지능(AI), 증강현실(XR), 인터랙티브 기술을 결합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감성을 전달하는 방식조차 기술에 의해 바뀌는 현대사회에서 CT(Culture Technology)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공식이 됐다.

얼마 전, 민행배원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광주의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결실이기도 하다.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논의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물꼬를 텃 셈이다. 그동안 거대한 배를 띄워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린 의미있는 발걸음이다.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연구와 산업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자리 잡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문화는 기술과 만날 때 진화하고, 기술은 문화를 품을 때 비로소 확장된다. 그 중심축이 될 조치가 바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다. 이는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는 체계를 마련하고, 문화도시 광주를 미래로 이끌어갈 핵심 엔진이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행이 결실로 귀결되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작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쌓여가면서 비로소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남은 건, 그 오랜 기다림만큼이나 뜨거운 응원과 참여다. 시민과 창작자, 행정과 정치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꿈의 배가 끝내 희망의 항구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야 한다.

드디어 새로운 항해를 위한 닻이 올랐다. "깊은 물에 큰 배 뜬다"고 했던가.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는 조금 기대해도 좋을 않을까.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물결이 금공해진다.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어떻게 준비했나?

획에 반영되어 있는 신장성변전소를 구축해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후 전력계통협의체를 운영해 송전선로 경로지역의 주민과 전력망사업자인 한전이 모두 참여해 신속한 구축과 수용성, 공공성을 모두 달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계통은 전국적인 난미 문제로 계획보다 구축이 3년~5년 늦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옹골반도체클러스터 또한 전력계통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된 사업이 아닌 것처럼 향후 계통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발전단지 주변 주민과 어업인의 신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전제이다. 전남도는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말처럼, 해상풍력과 어업인은 때려야 할 수 없는 사이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해왔다.

그 결과 2023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격려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주민과 시군, 발전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 해상풍력의 비싼 발전원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전기 원가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초기 발전비용이 비싸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점차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수소 연료전지도 현재는 고가의 구매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내다본 헤안이다. 무탄소 전원의 한 축인 원전 또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두 발전원은 어느 한 쪽이 희생하는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 체계로 나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의 핵심 전력원이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도 전라남도도 적극 앞장섰다. 국방부 군 작전성 제한, 해수부 습지보전법 시행령 규제, 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제한 등 여러 장애물을 하나하나 해결해왔다.

군 작전성 제한의 어려움은 국방부와 끈질기게 협의해 나아가고 있으며,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 가능했던 규정을 완화해 설공 설,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공사비 3천여 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제한 한도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여 지역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앞에 놓인 여러 규제가 산적해 있다. 원칙은 지키되 규제는 협력한다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걸음 전진할 것이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국내외 풍력업체 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소멸, 인구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용원과 지지를 기대한다.

하지 않거 징계양정을 대폭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묵살, 마치 입을 맞추고 온 듯 난상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두고 구경 내외에서는 개탄스러워한다. 구의원들이 제 식구만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준다. 이는 분명히 일당독식의 폐해라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이들끼리 아합하는 '패거리 정치'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나아가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부르짖음과 달리 한 명의 유권자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작 듣지도 않은 행태다.

반목과 갈등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부구의회다.

이제는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란 슬로건 아래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한 단계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OPINION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사설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해야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총연장 198.8km에 달하는 동서횡단철도를 말한다.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는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고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달빛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교류 촉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거대경제권 조성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남북내륙선, 경전선과도 연계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인지 2017년 대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다.

민선 7기 이윤섭 전 광주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이 추진해 오다 민선 8기 들어 빛을 봤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란 명분을 등에 업고 적극 추진해 '261명의 여아의원 발의'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로 지난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과 맞물려 반년 넘도록 차일 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강 시장과 김경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돼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북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 들어가 있는 달빛철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광주 인구 순유출 심각...특단 대책 세워라

광주 인구의 순유출이 심각하다. 올 들어 3개월간 줄어든 인구가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광주는 지난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2502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이 기간 부산, 대구, 울산 등도 각각 2012명, 1573명, 685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광주에서 빠져나간 이들은 전남 1173명, 서울 551명, 경기 274명, 인천 107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겼다.최근 나주와 장성에 생긴 아파트의 영향으로 전남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인구유출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521명, 11월 605명, 12월 901명, 올해 1월 994명, 2월 1449명 등 매달 증가하고 있다. 6개월새 총 6972명이나 된다.

이 때문인지 올해 1분기(1~3월) 인구 순유출도 광주가 49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0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광주 주민등록 인구수가 2014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수천명 이상 감소하고 2020년부터는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14년 147만5884명에서 2015년 147만 2199명, 2016년 146만9214명, 2017년 146만3770명, 2018년 145만9336명, 2019년 145만6468명까지 매년 평균 3236명씩 줄었다.그런데 2020년(145만62명)부터는 2021년 144만1611명, 2022년 143만1050명, 2023년 141만 9237명, 2024년 140만 8422명 등 매년 1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사회 감소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전체 이동자중 20대(45만2000명)가 31%, 30대(38만2000명)가 22% 등 청년층이 절반을 넘었다.

인구,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계속되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 경제의 활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광주 정착을 위한 정부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lumns: 회장·발행인·편집인 권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편집부, 취재부, 영업부, etc.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